

포괄적 '위기상황' 적용.. 생계·주거비 지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도 경감 필요한 서류 사후 제출 등 특례 허용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당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 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여러 특례도 허용한다.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

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이에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경기 지역 9가구 12명, 제주 지역 11가구 40명 등 모두 52명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로 수급자가 사망·실종·부상한 경우, 수급 자격을

따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확인조사' 결과 가운데 수급 가정에 유리한 것만 반영할 방침이다.

피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준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부상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30~50% 깎고, '기초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간은 3개월로, 사고일을 포함할 달부터 소급 적용하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12개월동안 받지 않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사과, 국민·유가족 분노만 더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연석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 유가족에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사과 진정성 논란 확산

유가족대책위 “사과 아니다”... 정치권·종교단체도 문제 제기

세월호 침몰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과 여야 정치권에서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던 29일 오후 늦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며 비판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받는 유족들이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라며 청와대의 반응

을 요구하자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민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다시 찾아 “유감이다. 안타깝다”하는 말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말이라는 것을 전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 논란은 종교단체와 정치계로까지 확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진정성 사과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사과의 문제점

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 유가족에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며 “나도 죄인”이라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면 작은 위로나마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했지만 유족들과 국민이 아직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유족들이 ‘그만 하라’ 이럴 때까지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세월호 국정조사”

정의당은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정진 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물론이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의 이번 사고 수습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고 직후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는 제대로 가동됐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공무원+마피아 합성어) 문제 등도 낱말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안전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달출몰 07:03
해질름 19:18 달지름 21:16



진도해상 '맑음'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4	보성	맑음	8/23
목포	맑음	10/20	순천	맑음	12/25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8/21
나주	맑음	7/24	진도	맑음	8/21
완도	맑음	10/23	전주	맑음	10/24
구례	맑음	10/25	군산	맑음	10/21
강진	맑음	7/23	남원	맑음	8/23
해남	맑음	7/23	옥산도	맑음	11/17
장성	맑음	6/23			

◇바다 날씨		◇생활지수			
	오전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서부	면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32	08:40
	15:33	20:45
여수	10:17	04:09
	22:45	16:15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	☀	☁	☀	☀	☀	☀
11/26	12/24	13/19	11/24	11/25	12/25	12/25

與의원 5명 선주협회 지원 해외시찰

‘해양산업 지원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30일 한국선주협회 사업보고서와 해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정의화, 김희정, 이재이,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5월 6~10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의 항만을 시찰했다.

선주협회가 이들 의원의 시찰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유성 시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주협회는 2009년 이후 매년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승선체험 행사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상은 의원은 나머지 4명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총 51명의 명의로 올해 3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해운산업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과 해운업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 지양, 3차 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선진해운 세제인 톤세제도의 존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여야 중진협의체, 내일 세월호 참사 사과

국회 5선 이상 모임인 여야 중진협의체가 2일 오전 회동을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체 회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30일 “다선 의원들로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과 새

정치연합 문희상 의원,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구성된 여야 중진협의체에는 서정원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몽준, 이인제, 김무성, 남경필, 이재우, 정의화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문희상·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정세균, 이미경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사 62주년

중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